

# ‘기부 빙자 거래’...부영CC 용도변경, 민선 7기내 힘들듯

### “개발부지 줄여라” 환경청·교육청, 주민의견 반영 변경안 부영측 미뤄 나주시 “2월 중순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무소식...민선 8기로 넘어갈 듯”

지역시민사회가 ‘5000여파리 부영 특혜’ 사업으로 규정한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토지용도변경이 민선 7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민선 8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개발 부지 대폭 축소·학교 부지 추가 배정 등을 골자로 한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 나주시 요구를 받은 부영주택 측이 제출을 미루면서다.

이에 따라 민선 7기가 종료되는 오는 6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게 나주시 판단이다.

2일 나주시에 따르면 부영주택 측은 지난해 11월 나주시로부터 부영CC 토지용도변경 관련 변경안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이날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당시 나주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전남교육청·나주시(체육진흥과)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부영주택 측에 제시하며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혁신도시 내 개발 밀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했다. 아파트 개발 부지를 최소화하라는 의미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완충녹지 확대, 건축물 높이 하향, SRF열병합발전소 등 건강영향평가 대상

물질 관련 조사 보완 등을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부영주택 측이 제시한 계획안에 중·고교 신설부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나주시 체육진흥과는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시, 공공체육시설 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00명 이상의 시민과 시민단체도 나주시에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과 시민단체 의견은 “과도한 부영 특혜다”며 “부영주택이 혁신도시에 소유한 미착공 아파트 용지(C6, C7 등 2개 필지 13만㎡)를 우선 개발하라”고 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치계획 요구서를 나주시로부터 받은 부영주택 측은 당초 “2월 중순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현재까지 관련 공문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감감무소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 측에 관계기관·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요구했으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당장 내일 접수되더라도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민선 7기 내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나주시 도시계획 자문단 자문, 공청회, 시의회 보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남도에 서 용도변경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민선 7기 안에



2일 나주혁신도시에 문을 연 한국에너지공대의 개교 핵심시설(사진 앞 건물)과 공사 중인 학교 부지 뒤편으로 부영주택 측이 아파트 5300가구 건설을 위해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나주 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호수 주변 35만㎡·빨간 선 안쪽)가 보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절차 마무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영주택이 사업 속도를 돌린 늦춘 배경은 뚜렷하지 않다. 다만 지역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워낙 강경한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익 특정한·특정기업 독점 내지 특혜 이슈가 주목받으면서 부영주택 측 운신의 폭이 좁아졌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35만㎡)의 용도변경을 민선 7기 안에 끝마치려는 의지가 강했었다.

학교부지 기부로 인해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나주시 등 행정기관이 일정부분 배려가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었다. 그러나 대학 부지 ‘기부’를 감안하더라도 애초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

한 녹지를 주거용지로 바꿔, 그 위에 5300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들끓었다. 기부가 아닌, 기부를 방자한 거래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고, 부영주택 또한 이러한 비판을 누그러뜨릴 공공기여 등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금속 기계 식품 기업과 777억 투자협약 체결

### 목포·순천·함평 등 6개 시·군에 8개 기업 유치

전남도가 목포 등 6개 시·군과 협력해 금속·기계·식품 분야 8개 기업과 777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투자가 마무리되면 목포, 순천, 나주, 광양, 함평, 장흥 등에 306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왕가어업회사법인(주)은 목포 대양산단에 100억원 투자해 조미김 생산공장을 신설, 내수시장 판로 개척에 나선다.

(주)태정은 순천 해룡산단에 135억원을 들여 선박엔진 부품 생산공장을 신축해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금속단조제품 제조업체 현대IFC에 납품한다.

(주)지지는 광양 명당3지구에 150억원을 투입해 산업시설용 환경플랜트(기계여과기) 제작공장을 신설한다. (주)현대기업은 광양 익신산단에 25억원으로 금속 열처리시설 및 기계가공조립 공장을 새롭게 구축한다.

(주)글로이스는 나주 혁신산단에 46억원을 투자

해 수배전반 및 변압기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차담은 장흥 바이오산단에 21억 원을 들여 지역에서 생산한 호박, 돼지감자를 활용한 차류 생산공장을 신설한다.

함평 빙그린 국가산단에는 자동차산업 2개 기업이 300억원을 투자한다. (주)대호산업은 180억원을 투입해 자동차 부품용 고무제품 및 중대형타이어 생산공장을 세운다. (주)브이에이코리아는 120억원을 들여 자동차 범퍼 제조공장을 신설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 도시첨단산단에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 364억 들여 2025년까지 건립

광주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에서 에너지 산업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25년까지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지식산업센터 건립한다”고 2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원, 시비 204억원 등 364억원을 들여 부지 5116㎡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선다. 60개 창업 보육 공간, 기업 지원, 편의시설 등을 갖춘 에너지 자립률 100% 건축물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기업·기관 집적화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이자 경제자유구역인 도시첨단산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광주시는 기대했다.

광주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설계 용역을 거쳐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인구문제 극복 희망찾기 사업 운힘

### 시·군 공모로 유희시설 리모델링 청년창업 지원 등 8개 사업 선정

전남도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빈집, 빈점포 등 유희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거점시설로 재생산하고,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제출한 18개 사업 가운데 심사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도심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영광군은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및 메타버스를 구축해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해남군은 ‘복합민작은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복원초를 살려 정

착을 지원하는 이주 컨설팅, 공동체 교육 등을 지원하고,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농촌유학을 준비하는 가족의 거주 공간 9개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북일면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해 20가구, 총 94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거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인구 유출의 70~80%가 청년”이라며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특화 인구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강한 인구구조를 만들어 전남이 활력이 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만 0~2세 보육비도 지원

### “만 5세까지 전면 무상 보육”

만 3~5세 무상 보육·교육 추진을 선언한 광주시가 만 2세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만 5세까지 전 연령을 지원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 무상 보육을 실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집 비용은 매년 초 보육 정책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로부터 수령하는 필요 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한다.

한도 내에서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특성

화비 등을 수납하는데 시에서 이런 경비를 지원해 부모 부담을 없애겠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부모는 매년 최대 260만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광주시는 유치원비 지원은 교육청과 분담금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어린이집 비용도 지원해 만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실현할 방침이다.

외국 국적 유아 보육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유엔 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지향하는 보편 이념을 담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2021년도 중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배출자는

## 2022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누리집(홈페이지)을 참조해주세요.(www.budamgum.or.kr)

코로나19 개인 위생수칙

30초 이상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가침 시 옷소매로 실내 환기는 주기적으로!



유증상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계도 동영상 매뉴얼



폐기물처분부담금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062-949-0744, 0746